

與 “MB·朴 정부 불법사찰 8년간 조직적 진행 충격적”

MBC, 18대 국회의원 전원·문화계 인사 등 미행·도청 정황 보도 민주 “국민의힘, 진실 고백 먼저... 근거없는 DJ·盧 언급은 몰타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들의 정보 공개청구로 제출된 국외 일부의 사찰 문건 만으로도 내용은 충격적이다”면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지자체

장, 문화계 인사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게 사실이라면 2009년 12월 16일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8년 동안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속되어온 셈이다”며 “더욱이 불법사찰에 미행, 도청, 해킹이 동원됐다는 어제 MBC의 보도는 천안공노할 내용이었던”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진실을 고백하고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연일 ‘저급한 정치공세’, ‘습관성 정치공작’이라면서 책임 회피를 위한 전형적인 몰타기 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사찰 피해자 일부가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청구를 받아들여서 국정원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정보 공개 청구가 잇따라 이뤄지면서 그동안의 의혹이 퍼져처럼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근거 없는 경고까지 하고 있다며 “몰타기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MB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없었다’라고 부정한다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기엔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자면 될 일인데, ‘동물을 혼자 맞을 수는 없다’는 심보인지 김대중-노무현 정부 운운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청와대가 국정원에 정치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날짜가 나온다. 국정원이 여야 국회의원을 불법사찰하기 시작한 것은 이날부터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라며 “그 시절 싸 놓은 돈을 애기하고 있는데, 먼저 그 길을 지나간 이들과 더불어 답을 하라니 께버리야 할 밖에”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폭로했던 이석현 전 의원도 라디오에 출연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조직적인 사찰이 없었다”며 “MB 때는 매주 월요일에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단독 대면 보고를 하면서 사찰 보고도 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 대통령 “K방역은 중소기업 덕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전북 군산시 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생산시설인 품림파텍에서 일반 주사기와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비교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파동’ 촉각

4·7 보선 앞 리스크 우려 언급 자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에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추미애-윤석열 사태’의 재판이 될까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한 이견이 있었던 것인데, 박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이 1년간 해운 것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었겠나”라며 “신 수석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소통이 충분치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이나,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도 의견을 냈다가 묵살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신 수석을 잘 설득해 수습해야 한다. 서로 고집부리는 모습은 안 된다”고 우려했다.

당내에는 특히 4·7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파동이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크다. 상황이 수습되지 않을 경우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 징후로까지 비

화할 수 있어 한층 긴장하는 분위기다.

다른 당직자는 “신 수석은 검찰과 소통하며 박 장관과 개혁을 이뤄낼 유일한 인물이다. 몰러나면 바로 레임덕에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며 “신 수석이 패싱당한 게 아니다. 결자해지고 본인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했다.

실제 당에서는 지난 며칠간 신 수석과 친분이 있는 의원들이 직접 연락해 마음을 돌릴 것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공식 석상에서 신 수석 파동에 대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친문(친문재인)계 일각에서는 신 수석의 움직임에 불만이 제기되지만, 파장 확대를 경계하며 공개적인 비판 발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언론이 검찰에서 나온 이야기로 소설을 쓰고 있다”며 “대통령 비서면 대통령을 보좌해야지, 장관에게 이래저래러할 자리가 아니다. 그만 두든지, 계속하든지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재난지원금 발표 선거법 위반 아냐” 선관위 “정책 발표는 직무행위”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18일 정부-여당이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으로 의율(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행안위에서 4·7 보궐선거 전 재난지원금 지급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의 질의에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행위와 실제 지급 행위 2가지를 나눠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같은 당 최춘식 의원이 “선거 전 주민 식사 비용을 내주겠다고 했다”가 처벌된 전례가 많이 있는데, 선거를 앞둔 재난지원금 약속은 위법이 아니냐”고 다시 묻자 “정부가 본인의 직무행위 일환으로 정책 발표하는 것을 기부행위 약속으로 연결 지어 얘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답했다.

김 총장은 다만 실제 선거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졌을 경우의 위법성을 묻는 말에는 “구체적 사안이 발생하면 판단하겠다”고만 밝혔다. /연합뉴스

대권 잠룡들, 5·18 가두방송 故 전옥주씨 추모 정세균 총리·이낙연 대표·이재명 지사 “큰 빛 졌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가두방송의 고 전옥주(본명 전춘씨)씨에 대한 대권 잠룡들의 추모가 이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 민주주의는 당신께 큰 빛을 졌다”며 애도했다. 정 총리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항의 깃발이 깃발하고 광주 영혼이 깃발이 될 때, 전옥주님의 서럽고 뜨거운 외침은 고립된 죽음의 섬, 광주를 일깨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광주시민의 가슴에 뜨거운 불꽃을 지피고 계엄군의 가슴을 시리게 만들었다”며 “겪어온 평생의 아픔을 홀로 짐지게 해 정말 죄송하다. 이제 고통 없이 편히 잠드시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추모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 빛을 언제나 잊지 않겠다”고 애도했다. 이 지사는 전날 밤 시흥시 시화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세 빈소를 조문한 뒤 8일 페이스북에 “전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민주영령들의 목숨을 건 숭고한 희생으로 빛 모

르던 소년공이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속절없이 시간은 흐르고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았던 역사의 주역들이 우리 곁을 떠난다”며 “비통한 마음 다잡고 그 정신을 소중히 기억하는 것은 남은 저희의 몫”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17일 SNS를 통해 “그날 밤 금남로에 울려 퍼진 피맺힌 절규는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을 세상에 알렸고, 항쟁 확산의 기폭제가 됐다”며 “여사의 방송은 5월 광주의 절규였고, 저항의 깃발이었다. 고인은 그렇게 광주의 맨 앞줄에서 시대의 정의를 세우며, 민주주의를 지키셨다”고 평가했다. 또 “남은 가셨지만, 그 결의와 희생은 광주와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는 님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추모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이형석 “인권유린·사건 조작 경찰관 특진·서훈 박탈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 국회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인권유린과 사건 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국가배상금을 해당 경찰관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나리슈퍼 강도 살인 사건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4대 재심 무죄 사건과 관련해 특별 승진을 한 경찰관은 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 불법구금 등 강압

적인 가혹행위로 무고한 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에 게 살인 누명을 씌운 뒤 줄 줄이 특별 승진을 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특진과 서훈 취소 여론이 높았으나, 모두 징계시효(3년-5년)이 지나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이 의원은 “선량한 시민의 인생을 짓밟은 경찰관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에 기가 찬다”면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경찰에 대한 특진과 서훈 혜택을 취소할 수 있는 인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장/단기, 최고 투자처

- ▶ 남구 덕남동 임야, 지분매매
 - ▶ 광주대 지나서 전남대병원 근처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합
 -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 64-21번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됨
 - ▶ 평당 20만원씩 200평 이상 매매함
- 문의. 010-3605-500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왕왕~ 울리지 않는 보청기
-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